

특집 >>> 10·11면 바다에 쓰레기 마구 버리는 대한민국	몸 >>> 15면 여자의 가슴이란 무엇인가	박태균의 베트남전쟁 >>> 22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트라우마
--------------------------------------	----------------------------	---------------------------------------



커버스토리 3·4면

미안해요 아시아

일본자본 지배 실상 밝힌 무라이 요시노리
1주기를 맞아 '제국주의 한국'을 생각한다

무라이 요시노리는 현장에서 아시아 민중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연구자였다. 새우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가 맺고 있는 지배-종속관계를 규명한 그의 대표작인 <새우와 일본인>(1988년)의 후속편을 쓰기 위해 2007년 6월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전통방식을 사용한 새우 양식장을 둘러보는 모습. 이 양식장은 일본의 민중무역을 담당하는 에이티제이(ATJ)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아티나(ATINA)가 관리하고 있다. 무라이는 말년엔 주전공인 인도네시아를 넘어 한국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모래시계>나 <서울 1945> 등 한국 현대사를 그린 드라마를 즐겨 봤고, 2010년 5월엔 자신의 조부인 무라이 기치베에가 경영하던 경남 진영의 '무라이 농장' 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100년 만에 왔습니다. 마을분들에게 큰 피해를 줘서 '미안해요(한국어로)'라고 말했다. 후학들에게 임버릇처럼 한 일 양국이 이제 성장이 아닌 아시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했다. 그가 숨진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나온 추모집 <아시아를 걷다-무라이 요시노리와 친구들>에는 무라이가 평생 사귀 일본과 아시아의 친구들 97명의 조사와 추도문이 실려 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며 밑줄을 그어가며 읽게 된다.

도쿄/취재 김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사진 우쓰미 아이코 제공

시중유통 안됐다면 카드정보 8050만건 이미 대출모집인에

검찰, 정보 거래한 4명 추가구속
"2012년부터 5차례 걸쳐 팔려나감"

1억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국민·농협·롯데 등 신용카드 3사에서 8000만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대출모집시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수차례 시장 유통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정부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

장원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14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출중개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구속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아무개씨와 광고대행업자 조아무개씨는 새로운 혐의를 반영해 추가 기소를 불구속기소된 대출모집인 이아무개씨는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구속자는 모두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씨가 조씨에게 2300만원을 주고 100만건의 고객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씨가 대출중개업자 김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씨로부터 농협카드(2430만건)와 국민카드(5370만건)의 정보를 넘겨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씨가 대출중개업자인 또다른 김씨와 한씨에게도 모두 470만건(롯데카드 250만건 포함)의 정보를 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카드 3사 정보가 시장에 유통된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추가 유출 정보는 8050만건(중복 제외)에 이른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브리핑

에서 "(정보를 받은) 김씨와 한씨는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사용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아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2차 유통 가능성을 열어뒀다.

카드 3사에서 빼낸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롯데카드 등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박씨가 정보를 빼낸 시점과 박씨가 조씨 등에게, 조씨가 김씨와 한씨 등에게 정보를 넘긴 시점은 파악하지 못했다.

카드 3사에서 추가 정보 유출과 시장 유통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재용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지난 1월 이후 줄곧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sp96@hani.co.kr

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판사 출신 '전문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통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최성준(57·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선 최 후보자가 방통통신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과, 현직 고위 법관이 곧바로 대통령 임명직으로 이동한 점 등을 들어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5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28년간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인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언론계에서는 법조계에만 몸담았던 최 후보자가 다양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업계의 치열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내보이고 있다. 강성남 전 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방송 공정성 문제나 증편에 편향된 방송정책 등 민감한 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최원환 김미희 기자 soulat@hani.co.kr

협력자 김씨에 '보안법상 날조' 적용 안해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감싸기 수순

김씨 '사문서 위조'로 영장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4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여전히 국정원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중국으로 들어가 정황설명서에 대한

허위 답변서를 삼합변방검사참이 발급한 것으로 꾸며 국정원에 전달했고, 검찰은 국정원으로 부터 이를 받아 법원에 증거로 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거짓으로 꾸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유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리라는 것을 알고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했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한테서 재판 증거로 중국 공문서 입수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들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씨가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인증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알았을적당한 정황들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한테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시 방역 분주한 강서습지공원 경기도 과천 천계산에서 발견된 큰귀기 폐사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 판정돼 폐사체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인 서울 동작·관악·서초·강남구 일부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오전 서울 개화동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정호 기자 hyopd@hani.co.kr

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 수사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에 한정에 소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국가

보안법의 날조죄를 적용하면 국정원·검찰까지 자동으로 엮이는 구조여서 이번 수사를 조심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알림
오늘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오전 10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국민수 신문 <한겨레>가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14년 3월15(일) 오전10시
▶장소: 백범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전화: (02)799-3400
▶문의: 한겨레신문사 대표전화 1566-9595
한겨레신문사